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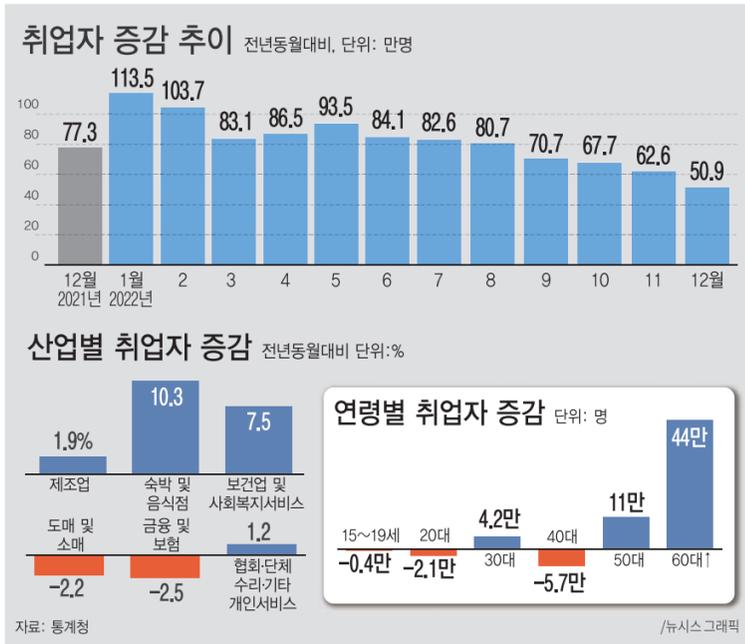
# ‘고용시장 훈풍’ 취업자 82만명 증가… 22년 만에 최대폭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영향  
고령층 일자리 절반 이상 차지  
경기침체로 올 취업자 증가 꺾일 듯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으로 1998년 국제 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36만 9000명 증가세로 돌아서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융 및 보험업은 -2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 2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81만6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19만6000명, 20대 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으로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0만 5000명(5.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5.9%로 전년보

다 1.3%포인트 올랐다. 임시근로자도 4만3000명(0.9%) 증가했는데, 일용근로자는 10만명(-8.1%)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6만1000명(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8000명(4.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더 낮게 봤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기술탈취 과징금 한도 20억으로 2배 상향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책과 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 기술 유출의 경우 범위내 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책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기술유출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해당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작아 범위 밖 역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최고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감경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이상~5% 미만이면 0.5점, 5% 이상~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감경하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내린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항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력이 결렬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세종=원승수 기자 hys@

## 부동산 규제완화에 ‘미분양 전망지수’ 감소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주택시장 연속락 대책 기대감 반영  
아파트분양전망지수 1월 하락 연속 ↑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35.8) 대비 5.9포인트(p)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119.7)을 시작으로 ▲10월(122.7) ▲11월(131.4) ▲12월(135.8) 계속 상승했지만, 이달 129.9로 떨어지며 1월 만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6.3p 상승한 58.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월 연속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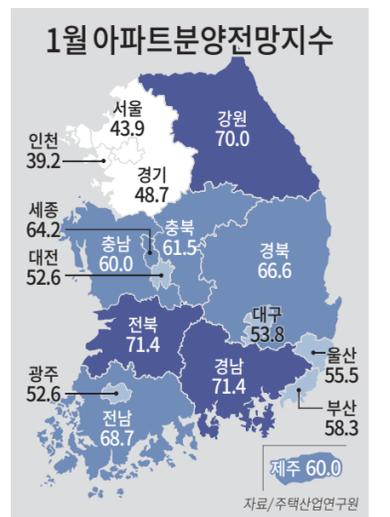
세종과 기타 지역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71.4)과 강원(70.0) 지역은 전달 대비 각각 21.4p, 20.0p나 상승했다.

경남은 지역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로 인한 지역 경기 회복이 반영됐고, 강원 지역의 경우 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 이슈가 작용해 지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3.9로 전달 대비 1.4p 낮아졌다.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은 3.3p(47.2→43.9) 하락했고, 공공과임 상태인 인천은 3.2p(42.4→39.2) 하락했다.

주산연은 해당 지수들의 변화 원인을 정부의 주택시장 연속락 대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속락 방안을 마



련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실거주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권지혜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규제 완화 적용 시기에 맞춰 사업자들이 분양일정을 조정해 추후 분양 물량과 미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연속락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포스코홀딩스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사무소 개소

벤처기업 발굴·육성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체인 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개소했다.

10일(미국 현지기준) 실리콘밸리 산호세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삼성, SK, 한화 등 국내 투자기관과 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담당, 도한이 포스코아메리카법인장, 임승규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는 포

스코그룹이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확장한 것이다.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담당은 “포스코그룹은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통해, 육성·투자 중인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 파트너 연결과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투자·육성·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글로벌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진출 초기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무 회의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벤처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본투글로벌, 벤처기업(11개사) 과 함께 ‘포스코그룹 육성·투자 벤처 글로벌 밸류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그룹이 육성, 투자하는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16억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 투자한다. 또 본투글로벌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